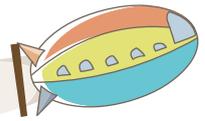


대전민주시민교육



밈그림그리기

일시 | 2018년 05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주최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 (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시 간	진 행	내 용
13:30 ~14:00	접수	<p>참석자 등록 및 방명 사회 : 정완숙(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p>
14:00 ~14:20	발제 1	<p>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제안 배경 및 추진현황 위정희(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p>
14:25 ~14:45	발제 2	<p>대전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수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역사편찬위원장, 목원대학교 교수)</p>
14:50 ~15:50	지정 토론	<p>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김종남(대전YMCA 사무총장) 신정은(마을교육연구소 희망멘토 소장, 대전 마을활동가포럼 공동대표) 이은주(대전여민회 사무국장) 이찬현(전 우송중학교 교사) 임재근(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 팀장) 전세환(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학술교육위원장)</p>
15:50 ~16:20	자유 토론	
16:30	폐회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추진 현황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

위 정 희

오늘 - 광장의 민주주의는?



광장에서의 경험은 시민들이 '우리'의 힘을 느낀 계기

분노가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

“우리나라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많으니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정치에 대해 사람들이 지치고 회의적으로 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 비폭력으로 부정한 권력을 응징했다”

오늘 - 우리의 일상 민주주의는?



“하고 싶은 말 오늘도 수없이 삼킨다. ... 바뀌는 게 없으니까”

“연대하는 광장에서 트인 말문은 고립과 경쟁의 개인으로 돌아가자 닫혔다. ‘작은 광장’이 일상에는 없었다. 배설과 냉소, 뒷담화, 독백만 남았다.”

* 경향신문 2017.1.1. 1면 기사

촛불 이후 일상의 민주주의 확대 최대 화두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 및 관심 제고

정부 민주시민교육 국정과제 설정

시민교육 활동가 1, 2차 워크숍 진행 (17.9~10. 사업회)

-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필요
-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과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필요

전국민주시민교육토론회 진행 (17.11.22. 연대회의의 시민교육위원회, 사업회)

- 2018년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 결의, 사업회가 실무 담당

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인가?

일상의 민주주의 확대 위한 기초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책 과정에 시민사회 주도권 확보 필요

→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다양한 결사체들의 수많은 네트워크와 그들의 상향적 조직화

민주시민교육 주체 역량 강화 필요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그러나 분절화
- 지역·영역별 고립된 시민교육 활동들의 연계
-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상호 역량 강화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결성 (2018. 2.21.)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위원장: 류홍번 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준비위원: 13개 광역 20명)

공동 사무국

- 조직: 연대회의
- 재정 및 행정: 사업회

누가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연대조직 등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결성

무엇을?

네트워크

지역 및 영역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주체 간 연결과 협력

역량강화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역량강화 지원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도울 콘텐츠 개발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중앙, 지역)를 위한 공동 대응

어떻게?

전국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역과 영역을 잇는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축

공동사무국을 통한 지역 및 전국 네트워크를 지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향후 계획

준비위원회

- 1차 워크숍(2.21.) 준비위 구성, 전국넷 제안서 및 준비위 2018년 사업 및 논의
- 2차 워크숍(7월) 2018년 사업 중간 평가 및 하반기 사업 점검 등
- 3차 워크숍(12월) 2018년 사업 평가, 2019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사항 논의

지역준비위

- 지역별 간담회· 토론회(4~6월)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참여 제안
- 지역별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 지역네트워크 구성 방안 및 지원 사항 등

영역준비위

지방선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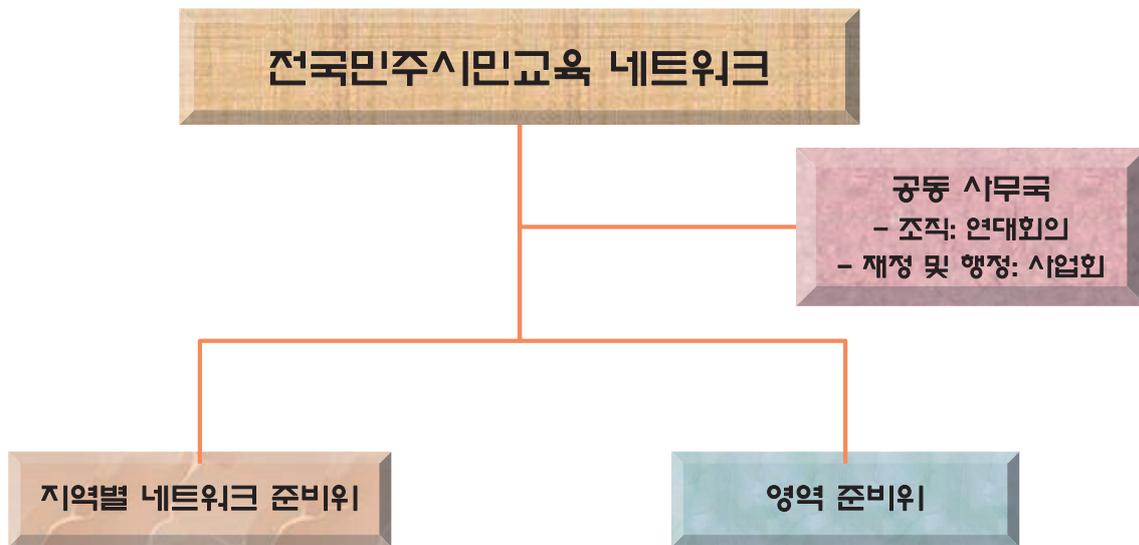
전국 토론회

9월,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필요성 등

출범식

11월, 민주시민교육 과제 도출 및 실행 방안 논의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 (2018. 11)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의미



민주시민교육
전국화, 지역화
병행 추진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수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역사편찬위원장,
목원대학교 교수)

I. 대전 시민교육의 현재

1. 시민사회단체 분야

(1) 중간지원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대전지역 중간지원기관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①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② 사회적 경제연구원

③ NGO센터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6개 주창운동단체)

특화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있음

2018년부터 대전참여연대 등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음.

(3) 대전충남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없음

② 2011년: 민주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실행

③ 2015년 초등학교 5~6년 대상으로 ‘민주야 소풍가자’(민주주의 현장체험 학습)

④ 2017년 6·10 민주항쟁 30년 기념 사업진행

- 어린이 민주주의 토론회

- 청소년 만민공동회

- . 민주주의와 환경가치의 만남
- . 청소년 민주주의 원탁토론회
- .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 마을에 꽃피다. 미래민주주의 박람회 등 진행

(4) 대전시민아카데미(인문사회학 실행 자원결사체)

현재 시민아카데미는 ‘대중강좌’, ‘기획강좌’, ‘작은강좌’, ‘희망의 인문학’ 등을 진행중에 있음. 이들 강좌 중에는 인권학교, 역사이야기, 진보를 논한다,

풍요를 위한 경제학 등 다소 민주시민교육과 연관성을 갖는 강좌들이 존재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아카데미는 인문사회학 분야의 아카데미를 즐기 위한 학습서클 단체이지 민주시민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음.

(5) 민주시민교육 시민네트워크의 준비

2018년 6월 현재, 대전·충남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위한 준비모임을 2~3차례 진행 시킴.

2. 지방정부: 대전시 교육법무담당관실

(1)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가 없고, 따라서 중간지원기구, 중장기계획,

시민교육위원회 등의 기구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교육을 담당하는 科 단위(정책담당관)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충청남도의 경우: 교육법무담당관실-시민교육정책 주무관 존재

(3) 대전시의 경우에, 기획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존재하고 그

산하에 교육지원담당 주무관이 있기는 하나 시민교육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단지 청소년을 위해서 급식 등의 지원정책을 담당할 뿐이다.

(4) 민선 7기 대전시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리더십은 기대해 볼만 하다

대전충남민주화계승사업회가 「대전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민주당 시장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실행

3. 대전시 교육청

- (1) 대전시 교육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육성' 교육기본방향: 핵심역량성장, 창의·융합교육, 안전·건강, 나눔·배려, 소통·참여로 설정하고 있으나, 세계시민육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科 단위(정책담당관) 혹은 팀 단위 조직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교육국 산하에 교육정책과가 존재하고 교육정책과 산하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존재한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팀조차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예산 혹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3) 대전시 교육청 산하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주요한 주제인 다문화 관련한 조직이 존재 한다: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교육과의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맞춤형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 ②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강화
- ③ 교원의 다문화 이해교육 역량강화
- ④ 맞춤형 다문화 이해교육 확산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동부다문화교육센터', '서부다문화센터' 등이 준비되어 있으나 일반인과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기 보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보여진다.

- (4) 민선 7기 대전시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리더십은 기대해 볼만 하다

현재 진보교육감 후보자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설치, '민주시민교육의 전면 실시' '평생교육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확대실시'등을 공약화하고 있다.

4. 평생교육기관: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

- (1) 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과 목표에 '민주시민교육'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다.
- (2) 2018년 5월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직제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서들은, 시민대학부 산하의 학습동아리를 담당하는 주무관, 정책연구부의 민

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담당 주무관 정도이다.

(3) 대전평생진흥원의 경우에, 다른 광역시도들과 달리, '대전시민대학'이라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주시민역량' 프로그램내에 3개의 프로그램 (대전학, 인문학, 공동체)을 운영하고 있다.

① 대전학: 역사, 문화, 지리·환경이 주요내용

②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심리, 문화 등이 주요내용

③ 공동체: 개인과가정, 지역공동체, 국가와 세계 등이 주요내용

공동체 분야는 대단히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제목과는 전혀 판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4) 2018년 12월에 민주시민교육 연구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4월부터 3가지 트랙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① 지역현안 민주주의, ② 지역참여 프로젝트, ③정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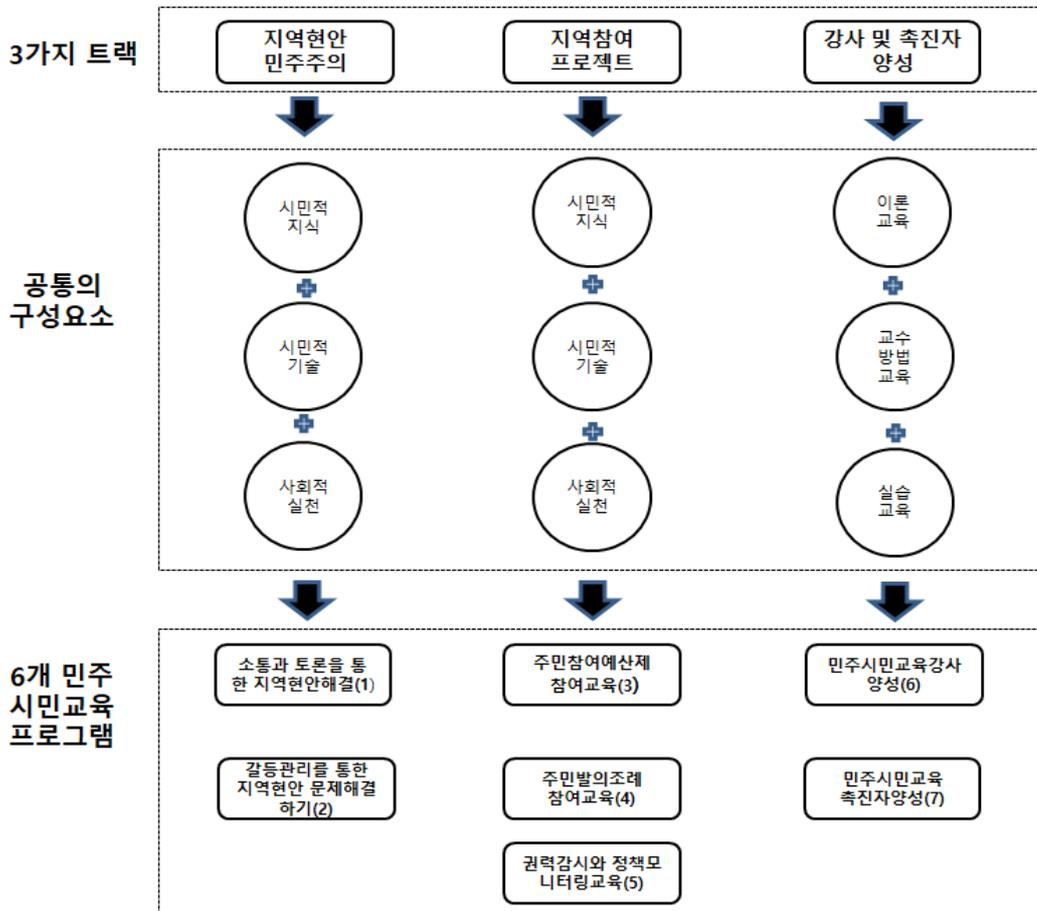
① 지역현안 민주주의 트랙: 지역의 중대 현안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프로그램. 숙의적 논의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민주적 태도를 상호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자로는 지역현안과 관계있는 주민 혹은 그룹

② 지역참여 프로젝트 트랙: 지역 현안에 직접 참여하여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의 지역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특정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 있는 적극적인 시민과 시민운동단체 혹은 풀뿌리 시민조직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정치참여 프로젝트 트랙: 정당 활동 및 정치적 리더십을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 프로그램으로 정당 활동가, 사회운동가 및 잠재적인 정치지망생들을 대상

④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및 촉진자'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함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 시범 프로그램>



II. 대전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의 구성을 위하여

1.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는?

- 대전시가 중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다음의 6가지이다. 현재 (2018년 2월)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준비된 지역은 13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이 다음의 6개 요소들 중에서 일부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6대 구성요소 (아래 <그림 ?????>를 참조할 것)
 - (1) 민주시민교육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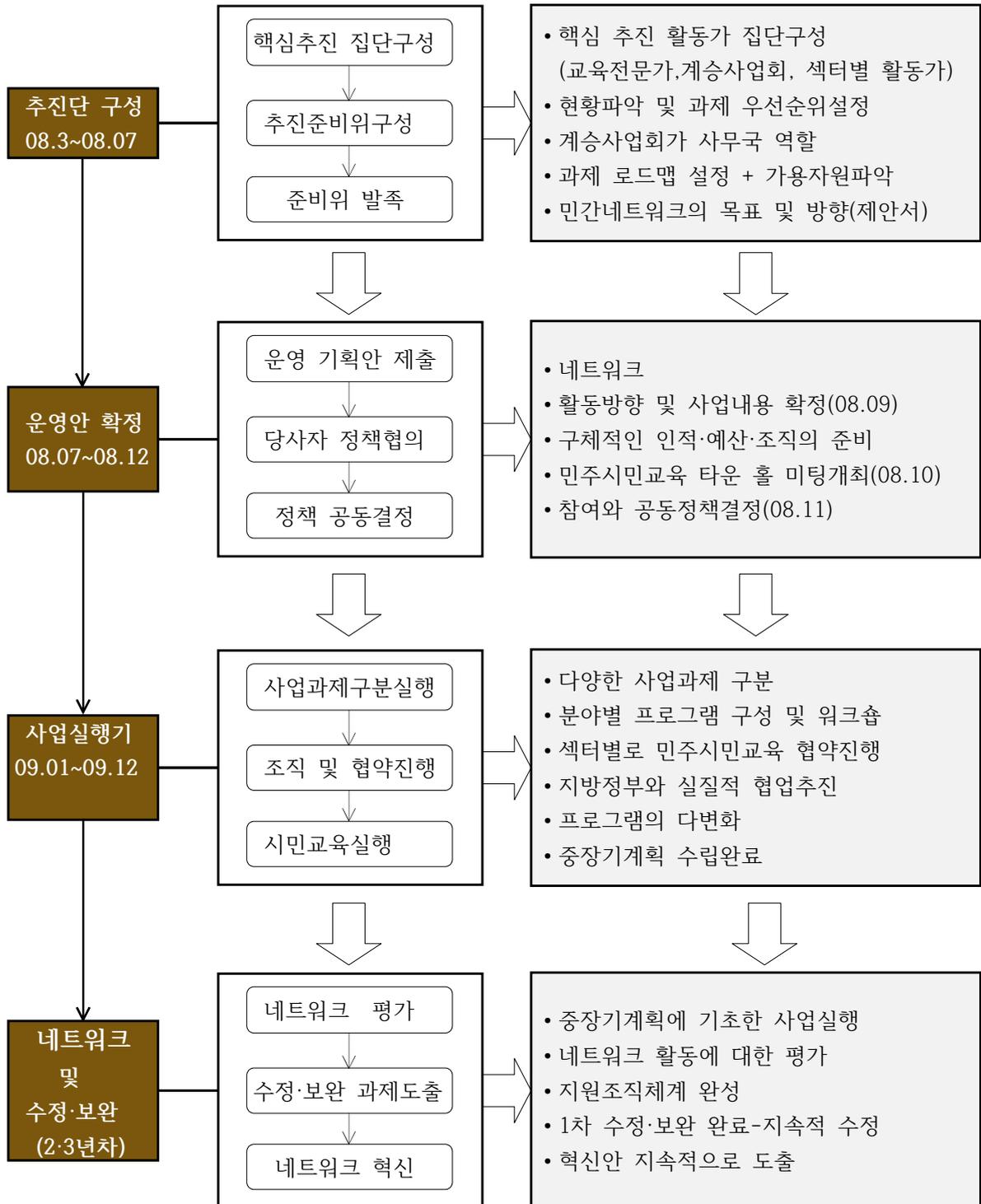
- (2)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 (3)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위원회(시민교육위원회)
 - (4) 민주시민교육 민간네트워크
 - (5) 민주시민교육 민·관·학 기관협의회
 - (6) 민주시민교육 담당 중간지원기관: 민주시민교육센터
- 위에 언급된 6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요소는 「민주시민교육 민간네트워크」이다. 시민교육은 민간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자발적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민주시민교육 민간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한 로드맵

(1) 시민교육 네트워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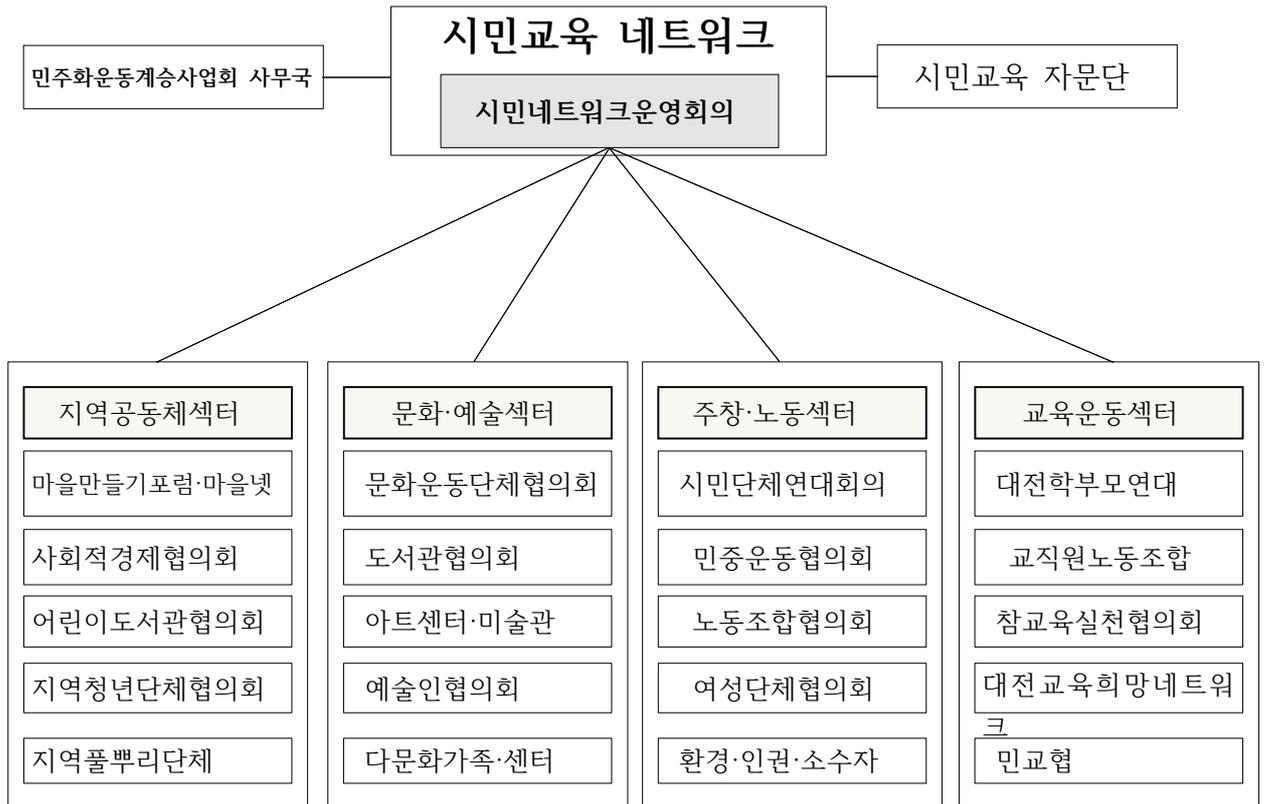
- 시민교육 활동가 네트워크가 우선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활동가 프로그램을 ‘시민교육학습동아리’ 혹은 ‘시민교육포럼’ 형태로 대전시, 평생교육원, 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시민교육 활동가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활동가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서 시민사회 섹터별로 특화된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섹터별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교육 활동가 네트워크가 섹터별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만들기 과정>



- 예를 들면, 주창운동(advocacy social movement) 섹터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시민교육담당 활동가를 지명하고, 지명된 활동가가 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결함한다. 이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주창운동 섹터에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그림 4-3〉 민주시민교육 민간네트워크의 구성



(2) 시민교육 네트워크의 지위

-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정부기관의 파트너로서 기능한다.
- 섹터별로 시민교육을 매개하고 코디네이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정부-기관-시민사회 개별단체들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행하거나 섹터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 예를 들면, 마을만들기 활동가 포럼, 어린이도서관협의회, 교육관련 단체, 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전지부 등등의 섹터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습자들을 모아주고,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중간지원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의 주체가 된다.

(3) 시민교육 네트워크의 주요임무

- 시민사회의 시민교육역량을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시민사회역량강화 전략을 구사하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역량, 전문성, 리더십 등등을 구축한다.
-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사회 네트워킹을 확장한다.
- 우수 시민교육 사례 경연대회, 시민교육 순회 강연회, 순회 세미나 등등을 조직함으로써 시민교육 리더십을 강화한다.
- 시민교육과 관련한 집단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교육 대전포럼」을 주관하고 운영한다.

3. 대전민주시민교육 기관협의회

(1) 시민교육행정협의회를 필요성

- 시민교육의 융복합적 접근은 많은 프로그램의 사회적 근방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이다. 시민교육과 관련되는 정부부서 간에 융복합적 행정을 실현한다.
- 민주시민교육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책코디네이터가 가능하다.
- 최소한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는 일관된 교육철학과 방향이 관철되어야 한다.
- 대전시 중심의 행정협의회는 대전시 교육정책담당부서-평생교육원-대전시 교육청 시민교육담당부서로 한정시켜 진행할 필요
- 다시 말해서, 구별 문화원, 대학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도서관협의회, 주민센터협의회, 박물관협의회 등등이 참여하는 기관협의회와 별개로 행정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접근방식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시민교육 상품을 소비할 수 있어서 좋다.

(2) 시민교육 행정협의회 역할 및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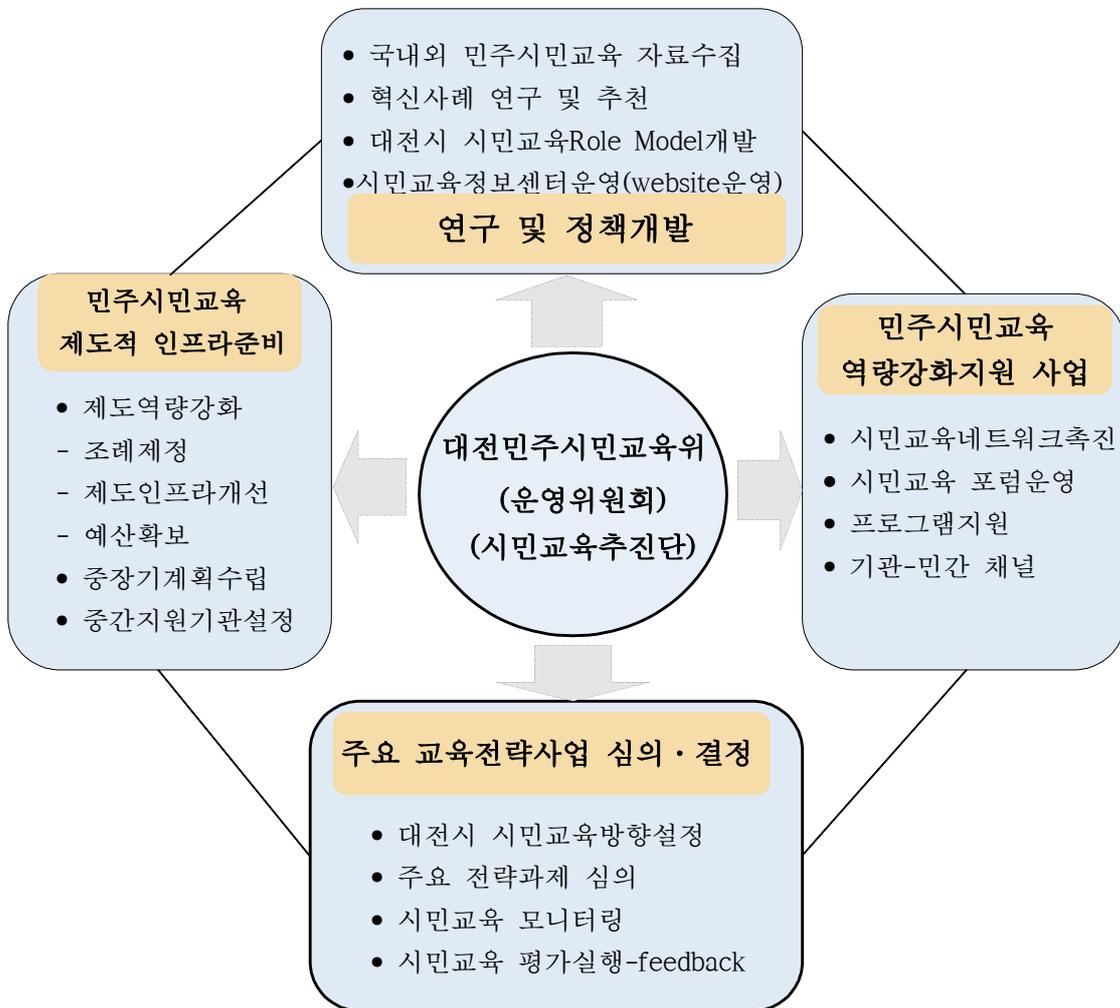
- 정부를 대표하여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파트너가 되어 시민교육 민관협치를 주관하며 시민사회와 항시적 협치 채널로 기능한다.
-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 중간지원기관(민주시민교육센터)에 재정, 전문성, 행정 등등을 지원한다.
-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민주시민교육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수립을 주관하고 수립과정을 감독한다.
- 제도·행정·전문성·권위 등을 지원하지만 시민사회에 간섭하지 않는다.
- 초기에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발육·성장하는데 기여한다.
- 행정협의회는 실무체제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지원을 논의한다.
-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협의·조정한다.

4.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위원회

-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지만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민간 파트너와 정책협의를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한 정책 파트너 관계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이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현장 중심적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하루속히 「거버넌스위원회」체계로 전환하여 민간조직들과 정책협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민주시민교육위원회」(거버넌스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림 4-2〉 거버넌스 위원회의 역할



- 거버넌스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들을 다룬다. 그리고 단순히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전략적 과제들을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심의·결정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실행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현재 대전시 단위에 거버넌스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민주시민교육관련 제도적 인프라를 준비하고, 특히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민주시민교육센터, ②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③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4-1〉를 참조).

(2)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위원회」의 구성

- 거버넌스 위원회는 구성하는 핵심은, ‘시민교육담당 기관협의회’ + ‘시민교육 민간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경기도 위원회의 경우에는, 도청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원 시민교육담당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시민교육단체 네트워크, 교육단체연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1〉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위원회」의 구성

구성영역		인원수
당연직 위원 (기관협의회)	대전시 교육담당부서장, 평생교육원 시민교육담당부서장, 대전시 교육청 시민교육담당부서장,	명
대전시장 위촉	학계 전문가 또는 현장 전문가	명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명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시민단체 연대회의(주창운동)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명
	시민사회운동섹터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노동, 마을운동, 사회적경제, 종합사회운동 등)	명
	지역단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명
	민간교육단체 네트워크	명
계		명

-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의해야할 것은 시민교육기관들이 행정협의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민간영역에서 시민교육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민관협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이 별개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상태에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시민사회 역량이 부족하여 민간 네트워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활동을 통하여 민간영역 네트워크를 추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의 원칙

-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속성과 정시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매월 1회, 임기3년 등)
- 리더들의 민관협치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럼기획 및 운영
 - 포럼을 통한 세부과제의 공유-민관협치 소통- 민관협치의 사회적 학습 획득
 - 시민교육협치 정보의 교환
- 거버넌스 위원회의 운영실무단위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운영실무단위는 민간 측의 간사와 행정협의회 측의 간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거버넌스 위원회의 운영은 민과 官이 같이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실무운영책임자의 배분-공동책임운영제)

〈표 4-2〉 거버넌스 위원회의 운영방식

대범주	세부항목	비고
참여자 구성	(1) 위원회가 전문가·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다양성과 시민대표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2) 정부주도성으로 인해 위원회 운영이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 담당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경향은 없는가? (3) 참여자들은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참여범위 대표성 참여기준
위원회 운영	(1)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정이 존재하는가? (2) 네트워크는 민·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3) 회의는 정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가? - 최소 2개월에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가?	논의과정 이건조정 결정방식 회의정기성
기능의 적정성	(1) 민관협의체는 적절한 수준에서 사업을 선도(guide)하는 역할 및 감독·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2) 거버넌스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3) 통합적 거버넌스를 위해서 지역단위 사업을 상호 조정 ·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가?	
책임소재	(1) 네트워크 참여자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고,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한가? (전문가, 행정담당자,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교육단체 등) (2) 위원회는 담당공무원과 책임을 충분히 나누고 있는가?	책임소재 적시 역할분담 명료
민간참여 수준	(1) 민간 파트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2)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가?	실질적 민관 파트너십 민간자율성
문제해결 능력	(1) 민관협치가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2) 세부적인 평가시스템은 갖추고 있는가?	문제개선 소비자만족
지속 가능성	(1)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는가? (2) 사업경험을 통하여 민관 상호간 신뢰는 신장되고 있는가? (3) 지속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공동워크숍 상호간 신뢰
투명성	(1) 회의 결과는 주민들(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고 있는가? (2) 모든 회의는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되고 있는가?	정보공유 정보공개

5. 「대전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준비

- 대부분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2013), 경기도(2017), 성남시(2015), 광명시(2017), 하남시(2017), 수원시(2018), 의정부시(2016), 전라남도(2017), 전라북도(2016), 안양시(2017) 등
- 대전충남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민선7기 시장 후보자와 ‘대전민주시민교육센터’설립과 관련된 정책협약을 진행하였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 ①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제정
 - ②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 ③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 ④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⑤ 민주시민교육 기관협의회 설치

⑥ 민주시민교육 민간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 대부분의 조례안이 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대 구성요소)

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

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의 책무

③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④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⑤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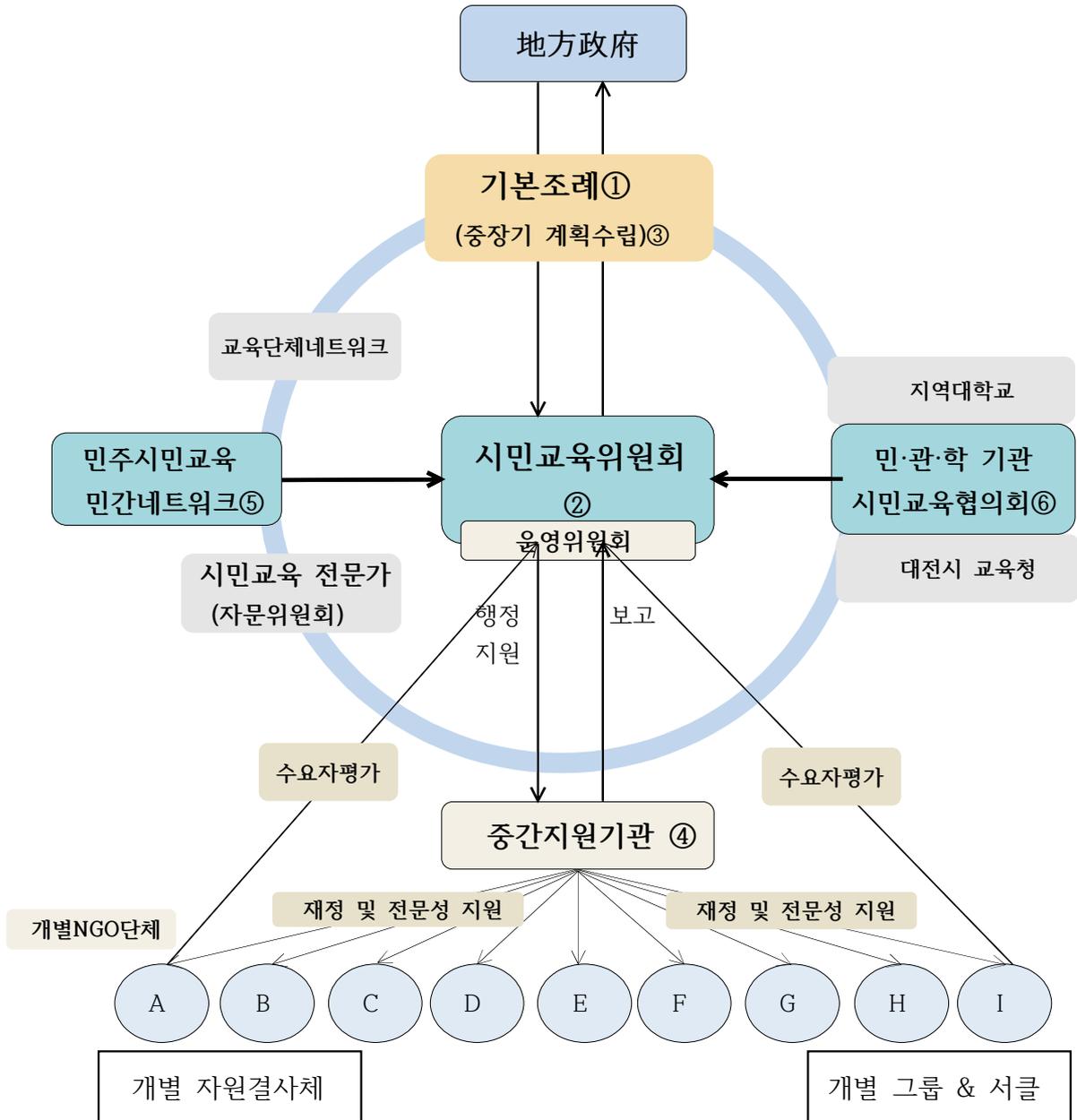
⑥ 민주시민교육 민간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⑦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중간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⑧ 민주시민교육 관련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에 필요한 구성요소>



6.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1) 중장기 계획수립의 필요성

- 중장기 계획은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드라이브가 실질화 되는 경향이 있다. 중장기계획에는 인적자원·물적자원(예산)·법적지위가 담보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실행력을 갖는다.
- 시민교육은 장기적 기간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일치된 목표와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 프레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교육목표도 교육철학-방향, 비전, 추진목적, 추진전략, 세부실행계획, 예산과 인적자원의 배치 등등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 교육방향과 목표는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교육실행방법과 효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평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 중장기계획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계획의 기본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방향
- 대전민주시민교육의 비전
- 대전민주시민교육의 목표
- 대전민주시민교육 추진전략
- 대전민주시민교육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실행계획
- 세부실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 재정계획, 인원배치계획 등

7.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기관: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1) 중간지원기관의 필요성

- 개별 자원결사체 혹은 사회적 그룹들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주의적 접근이 갖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대안이 중간지원 기관(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이다 (Bandyopadhyay & Dogra 2005;2).
- '지원기관이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가치에 기초한 시민사회조직 혹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훈련 및 교육’, ‘연구와 정보 확보’, ‘네트워킹’ 등의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IDR Report 1999;9). “다원적 사회에 있어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시민개인의 수요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욕구를 파악하며, 인재·자금·정보 등의 제공자로서, 또한 개인 간 혹은 자원결사체 간의 중계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 이다(주성수 2012, 25에서 재인용).

- 중간지원기관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교육철학과 방향 가지고 있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교육운동을 가이드하기 위한 철학과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원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우선은 ‘관점에 대한 능력(capacity related to perspective)’ 이다. ‘관점에 대한 능력’이란 새로운 시민교육에 대한 비전을 명료화 할 수 있는 능력, 교육현장과 교육수요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rown & Kalegaonkar, 1999; Bandyopadhyay & Dogra 2005).
- 둘째, 중간지원기관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민주시민교육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고, 아마추어리즘으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으며, 자원부족과 섹터적 협소한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개별단체 혹은 개인들의 민주시민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교사훈련, 기술적 지원, 정보의 공유, 교육네트워킹, 정책 코디네이션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개인 혹은 자원결사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분배하고, 출판, 훈련프로그램, 세미나, 상담 등을 통하여 원조기능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을 의미한다(Fowler, 1997).

(2) 중간지원기관의 핵심적인 기능

〈표 4-3〉 중간지원기관의 핵심적 기능

	세부기능
연대와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교육이슈를 공유하고 합의하기 위한 포럼, 세미나 조직 · 공동행동을 위한 코디네이터로서 기능 · 민간부분 네트워킹, 교육기관 네트워킹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술적인 능력과 교육 조직적 능력 배가 · 시민교육활동가 및 운영자 배출 · 민주시민교육 교수자 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 및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확보 및 배분 · 시민교육기금 모금 · 학습동아리 및 학습 서클 지원 · 노동조합 및 직능단체 학습 프로그램 지원
민주시민교육연구와 정보수집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내, 국외 시민교육 사례연구 · 시민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분 · 민주시민교육 정보센터 운영
교량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기관 사이의 교량역할 · 정부-민간 사이의 교량역할 · 지역-지역, 중앙-지역 간의 교량역할 담당

참조: IDR Report (p.14)를 재구성

(3) 다양한 중간지원기관 위탁 방식

- 현재 서울시는 흥사단을 민주시민교육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이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시민교육이란?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지난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교육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데, 환경, 인권, 성평등, 노동, 통일, 사회적경제, 공동체, 평화, 다문화 등등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학교에서 각 분야별 교육을 의무화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교육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영역들을 묶어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합의가 되어서 각 분야별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교육정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각 영역별로 분야별 교육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의 협약식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먼저 시행한 타지역 사례를 보면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교육들이 지금의 학교교과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주제와 교수법이 조금 바뀔 뿐 학생들에게 강제로 던져지는 또 하나의 수업이 되는 문제가 있다. 더 열악한 경우는 1회성 교육을 학교를 돌면서 하는 외부강의가 되어서 학생과 강사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왜 필요한지 목표는 무엇인지 대전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명확한 상과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과 시민사회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교육 활동가 네트워크가 우선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활동가 프로그램을 ‘시민교육학습동아리’ 혹은 ‘시민교육포럼’ 형태로 대전시, 평생교육원 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는 발제자의 제안에 공감한다.

아직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란 단어는 낯설기만 할 것이다.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미, 내용 구성, 교육 방법 등이 단체, 기관, 기획자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하는 입장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것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념, 가치, 원칙 등 각기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 혹은 정치생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정보 전달과 비판과 판단의 범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체계에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게 하는 실천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담은 교육들이 진행되진 못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장단점을 통합하여 대전형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6대 구성요소를 제안하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러한 제도와 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세우고 교육방법에서 상호보완할 수 있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상호단위들의 상시적인 논의와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대표성, 객관성, 결과에 대한 실행여부 등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유사한 기구들을 너무 많이 만들지는 않으면 좋겠다.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이나 평생교육진흥원 혹은 관련 시민단체를 활용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의 대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③ 대전형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을 진단하고 나아가 한 시민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필요 기존의 각 섹터에서 고유하게 하던 영역들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방법도 강의 중심, 쟁점중심, 토론중심, 실천중심 등 여러 주축들 별로 다양한 상황으로 각 사안들을 상호보완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전형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김종남(대전YMCA 사무총장)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과 시민이라는 단어는 멀게만 느껴진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도 국민이다”를 외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부만 열심히 해야 하는, 아직 미성숙한 그저 그런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서울발산초등학교 이은진 교사의 ‘우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초)’이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고 있더라도 형식적이며 학교의 비민주적인 문화와 관행과 시간부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역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학자들은 교사가 비정치적이거나 중립을 표방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며 중립적인 교사는 최악이라고 표현한다.

YMCA는 청소년YMCA연합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직의 운영과 대표자와 임원 선출, 한해의 운동과제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다. 지역마다 청소년Y 연합회에서 지역의 운동과제도 선정하고 열심히 활동한다. 회의 때에는 열띤 토론은 물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기주장을 펼치는 과정은 필수이다.

YMCA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2005년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진행되어 왔다.

전 세계 232개국 중 93%인 217개국에서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하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선거권 연령도 18세 이하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북한은 17세,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은 16세면 투표가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18세 공직선거법 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통령 파면에 따른 19대 대선이 빨리 진행되면서 제발 18세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국청소년Y연합회에서는 ‘대선 모이투표’라는 방법을 결의하였다.

[모의투표 최종 결과]

- ▶ 청소년 모의투표 사전선거인단 등록인원 : 60,075명
- ▶ 청소년 모의투표 투표참여자 : 51,715명
 - 온라인 투표참여자 : 43,617명
 - 오프라인 투표참여자 : 8,098명
- ▶ 청소년 모의투표 최종 투표율 : 86.08%

문재인(1위) 20,245명(39.14%) / 심상정(2위) 18,629명(36.02%)

[대전, 충청도 투표 결과]

대전광역시	1,693명	문재인 (642명)	심상정 (622명)	유승민 (182명)	안철수 (156명)	홍준표 (61명)
충청남도	3,035명	문재인 (1,130명)	심상정 (985명)	안철수 (372명)	유승민 (297명)	홍준표 (114명)
충청북도	1,150명	문재인 (460명)	심상정 (459명)	유승민 (119명)	안철수 (76명)	홍준표 (21명)

나만 안 되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



청소년이 직접 뽑는
교육감 및 광역시장 도지사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20만 명 모집 중!
5월 8일 ~ 6월 13일

대상 : 참정권이 없는 만 19세 이하 대한민국 청소년
방법 : www.18vote.net (청소년모의투표홈페이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사무국: YMCA 대전YMCA

청소년Y 회원들이 주도한 민주시민으로의 새로운 활동이었다. 청소년들은 이제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성인들보다 더 빨리 민주시민으로 스스로의 주체성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청소년들을 아직도 비민주적인 학교에, 공부라는 울타리에만 가둬 둘 수 없다. 학교는 학생시민, 교사시민, 학부모 시민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 시민으로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 모이투표는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청소년모이투표이다. 대전지역에서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Y 등 청소년 자치조직들이 결합하여 청소년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만18세 참정권 실현은 더 깊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일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존재, “19금”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참여와 관심도 갖지 못하도록만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사람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18세인 청소년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의 이념 중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 투표야 말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국정농단사태에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주시민의 구성원으로써의 정치적 판단능력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기성세대들의 부정부패 속에서 청소년들을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청소년들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 18세 참정권의 당연한 권리이며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한다.

[2018. 02. 08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독일의 경우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는 독일 최대 규모의 학생대상 모의투표운동이다.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2017년 9월에 실시한 연방총선 청소년모의투표는 전국적으로 3,490개 학교 958,462명이 투표하여 83.1%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냈으며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은 ‘청소년 모의선거(School vote, Skolval)’ 학교 투표운동으로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으며, 2006년에는 86.66%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는 1,800여개 학교가 참여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총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선거에 약 500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621,300,000원)을 출연하여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로 학생 선거 프로그램이다.

2003년 10월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2006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학생선거에서는 2,500학교 468,000명이 참가하였고, 2015년 10월 캐나다 연방선거를 앞둔 청소년 모의선거는 6,662개 학교 992,000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정부 인가 자선단체‘CIVIX’에서 주관하여 실제 선거일을 1주 정도 앞둔 시기에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이 지정되어 진행된다.

대한민국은 2017년 ‘청소년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에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모의투표를 실시하여 60,075명의 청소년 선거인단이 참여하여 86%인 51,71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청소년 모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 민간네트워크 준비에 앞서

신정은(마을교육연구소 소장, 대전마을활동가포럼 공동대표)

4.3 제주사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 항쟁, 6.10 민주항쟁 등 우리의 역사는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영령들이 무참히 희생당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시민교육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가슴 벅찬 일이다.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이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추구한다. 시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재판, 시민정책제안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 향상과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수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공공의 영역에 머물렀던 정책 영역에 시민이 전면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행정적·교육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이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역량 외에도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전국 시민교육네트워크의 준비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늦은 감이 있기는 하다.

장수찬교수가 제시한 대전시민교육의 현황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시민교육이 부재하다. 대전에는 5개 구 중 4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각각의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 분야의 개설과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낮아서인지, 참여 수준이 낮아서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다.

한 예로 2017년 대전마을활동가포럼에서는 ‘마을을 여는 마을자치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한 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마을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의 정치참여 등 마을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는 과정이었다. 이때의 참여율은 매 차시마다 30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하나 같이 정치를 새롭게 보았다. 시민의 참여가 정말 필요하든 것을 알게 되었다. 꼭 참여해야 겠다. 등 소감을 나누었다. 이 후 이를 계기로 ‘마을정치학교’까지 연결되어 직접 정치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올 해는 마을자치를 위한 학습모임을 운영 중에 있다. 10여 명의 소수로 마을 자치에 대한 심화하여 학습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총 6차시로 강좌로 설계하여 강좌가 끝나면 자체적인 학습모임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시민교육네트워크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도적·시스템의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을 대상화하는 교육의 탈피이다. 교육은 그 자체로서 목적인 것이다. 시민이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제도나 시스템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이미 된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행정적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본다. 이미 대전 시민의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평생교육지원조례가 있으며, 그에 따른 시스템으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원 등 인력까지 배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자칫 과거 민주화 운동세력의 또 다른 세력화로 보여질 우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네트워크 운영회의에 들어와 있는 다수의 조직이 시민사회단체 외 다른 조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시민교육은 한 시적 교육적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교육은 일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습하여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일상에서 작은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촘촘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미 앞서 경험한 민주화 운동의 선배들의 고민에 감사드린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은주(대전여민회 사무국장)

-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대해 더 이상 참고 있지 않겠다’는 선언인 미투운동이 한

창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와 성적 통제, 저임금화를 지렛대로 성별임금격차를 활용하여 왔다. 경제위기의 1차적 희생양은 언제나 여성이었다. 97년 IMF때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더불어 2008년 금융위기 때 30대여성의 대량 실업까지, 이명박근혜의 보수정권을 거쳐 젠더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임신, 출산으로 여성역할 한정, 보수화된 가족담론)

남성 생계부양자논리에 근거해서 여성을 보호의 대상, 의존의 대상으로 위치 지음으로써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구조화되었고,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와 남성생계부양자논리를 여성 통제의 기제로 활용하며 여성을 억압하고 성적 대상화하고 성차별을 구조화했다. 미투운동은 직장과 일터에서 여성이 동료 아니라 먼저 성적으로 소비되고 대상화되는 것은 물론, 채용부터 배치, 승진, 퇴사에 이르기까지 고용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 차별’의 결과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성평등 지수 116위(2017 세계경제포럼 성격차 보고서, 144개국 중), 성별 임금격차 1위(OECD)의 성적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 대전의 성인지 감수성은?

이런 와 중 지난해, 대전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A중학교의 집단자위 사건, 성폭력 피해여 중생의 자살사건, 대전시 산하기관 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시의원, 공무원의 동료 성희롱 사건 등. 이밖에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 사건 상담건수는 전체 342건 중 137건을 차지하고 있어 대전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대전’의 실체는 허울임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경찰 및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에 의한 2차 피

해 및 내부처리 절차의 부재,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 등은 전 세대, 전 직업, 전 계층에 대한 성 평등 교육의 필요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의 의무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일상의 교육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진단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 성평등교육의 내용 및 현황

○ 교육 내용

차시	프로그램명		교육목표	교육방법
1	성 평 등 교 육	‘같이, 가치’	①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을 알 수 있다. ②성별고정관념에 대해 알 수 있다. ③성인지 감수성을 키울수 있다. ④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상에서 성 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PPT자료를 이용하여 남녀의 생물학적차이와 사회적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동영상을 통해 성 평등과 성별고정관념을 함께 알아본다. 성 중립성과 형평성에 대해 학습하며, 성 격차 보고서등 우리의 현실등을 진단하여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성 평등 약속을 정해본다.

○ 2017년 성과

대상	지역아동센터	중·고등학교	기관
기관수	6	65	12
교육인원	87	19,114	770
총인원	19,971		

○ 2018년 현황

대상	중·고등학교	기관
기관수	9	2
교육인원	2,263	45
총인원	2,308	

- 성평등 교육의 제안

‘다름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관은 성 평등한 사회, 문화조성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을 구성하는 주요한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차별이 생기는 기저’는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왜, 젠더로 인한 위계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생애 주기별(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눈높이에 맞는 성 평등 교육은 꼭 필요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기본 토대는 성평등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1회성교육이 아닌 일상의 교육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이만 글을 마친다.

학교 현장에서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이찬현((전) 우송중학교 교사)

단위학교의 시민교육은 대전광역시 교육지표로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육성' 기본방향은 핵심역량성장, 창의·융합, 안전·건강·나눔·배려·소통·참여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단위학교의 현장은 행정 업무 중심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즉,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등을 중심으로 한 교무실 풍경은 교육활동과 인성 혹은 창의성을 갖춘 품격있는 교복입은 시민을 위한 조직의 모습이 아니다.

이와 같은 조직구조는 상급기관의 공문을 정확히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급 단위의 교육 행정 서비스 조직의 모습이다. 따라서 여기에 서 민주적인 소통과 배려, 나눔, 참여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 승진구조를 바꾸는 것에 교사들은 관심이 많을까? 단순히 점수관리가 아닌 실제적으로 무한 봉사를 책임지는 자리로 학교 관리자를 상정한다면 학교의 조직도는 학년 단위나 교과 협의체 중심의 구조로 바뀌고 실제 부장-교감-교장의 수직적 관료체계가 단순히 직책에 따른 수평적 협의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위학교와 교육청의 관계도 상, 하관계로 작동하고 아래는 대전 관내초등학교 집중장학 대비 학급별 점검사항이다.

- 분리수거함, 쓰레기통이 정위치에 있는가?
- 걸레를 넣어놓지 않았는가?(접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기)
- TV 뒤 공간에 상자나 물품 등을 쌓아 두지 않았는가?
- 교사 책 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았는가? (최소한의 수업 자료 외 컵이나 개인 물품 치우기)
- 칠판에 뿌연 분필 자국이 남아있지 않은가?

- (뿌열지 않게 산뜻한 초록색이 보이게 관리)
- 창틀과 문틀의 먼지를 제거하였는가?
- 죽은 화분이나 시든 화분이 있지 않은가?
- 신발장에 내빈용 실내화가 놓여 있지 않은가?(원위치로 보내기)
- 우산꽂이에 불필요한 우산이 꽂혀 있지 않은가?(집으로 보내기)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복도에서 정숙하도록 지도하며 인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위와 같은 수직적 명령관계의 구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무실부터 민주시민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학교라면 아이들과 수업시간에 민주시민 교육은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허울좋은 잡무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인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아래는 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 목적
 - ① 나눔, 협력, 평화, 생태, 젠더 등 민주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세계시민 양성
 - ②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③ 학교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 부여
 - ④ 다양한 가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 증대
- 추진과정
 - 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민교육추진단 구성
 - ② 관련 프로그램 개발

③ 대전시-교육청-시민사회단체 업무협약

● 기대효과

-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으로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 증진
- ②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교육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환경 조성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통일교육 진행. 복합 교육공간 필요

임재근(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팀장)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교육·문화 활동을 통해 시민들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민족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키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28일에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1. 평화통일교육 현황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창립 이후 통일리더십아카데미, 찾아가는 통일교육, 평화기행, 기사 작성,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심화 교육프로그램은 ‘통일리더십아카데미’입니다. 당초 평화통일 강사단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각 계각층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전에 15명~40명 정도의 참석자들의 신청을 받아 6~8개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매주 진행하는 연속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출석율에 따라 이수 여부를 결정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15년에는 17명이 신청하여 14명이 수료했고, 2016년에는 15명이 신청하여 9명이, 2017년에는 44명이 신청해 17명이, 2018년에는 43명이 신청해 26명이 수료했습니다. 초반에는 15명 내외로 참가인원을 제한하다가 2017년부터는 40명 내외로 규모를 확대했는데, 정원 이상으로 참가신청이 이루어졌고, 이수율도 높아졌습니다.

<표-1>2018년 진행 통일리더십아카데미 프로그램

	일시	세부 내용	강사
1강	3월 13일(화) 19:00	행복한 통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2강	3월 20일(화) 19:00	분단 트라우마를 넘어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심리학자)
3강	3월 27일(화) 19:00	재미언론인의 가장 따끈한 북한 취재기	진천규 재미언론인
4강	4월 3일(화) 19:00	북한의 세대교체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5강	4월 10일(화) 19:00	미술작품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심규섭 화백
6강	4월 17일(화) 19:00	우리가 전하고 싶은 통일 뉴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찾아가는 통일교육’은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강사들이 학교, 노동조합, 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한반도 정세, 노동자와 통일, 통일과 진로, 북한 바로 알기, 남북관계 등의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연구팀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8회(121명 수강), 2016년 15회(619명 수강), 2017년 12회(198명 수강)로 매년 월 1회 정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표-2>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민주·평화·인권·역사 코스

코스	세부 내용	소요시간
1코스	대전지역 평화·인권 기행 [(대전 평화의 소녀상)→대전형무소 터→산내 골령골 학살지]	2시간 ~3시간
2코스	평화·인권 기행 [대전 산내 골령골→충북 영동 노근리]	3시간
3코스	일제강점기 수탈과 저항의 역사 [원도심 정동, 원동, 인동 일대] (한밭교육박물관)→대전역→식산은행(현 다비치안경원)→어채시장(현 중앙시장)심상고등소학교터(현 위캔센터)→동양척식주식회사(현 동양타일)→인동장터→(군시제사대전공장 터)	2시간
4코스	한국전쟁으로 찢긴 대전의 현장 대전형무소터→(구 충남도청)→(충남도지사공관)→보문산 대전지구 전적비→산내 골령골→(애국지사총)	3시간 ~5시간
5코스	민주로드 대전고→4.19혁명진원지→대공분실 터→대전형무소 터→3.8의거탑	2시간 ~3시간
6코스	DMZ 평화기행 오두산 전망대→도라선 전망대→도라산 역	1일
7코스	제주4.3 평화기행 제주4.3평화공원(분향 및 유족 증언)→북촌학살 터(북촌초등학교), 너븐숭이4.3기념관→알뜨르비행장→섯알오름학살터→송안산 진지동굴→새별오름→관덕정	2박 3일

가장 효과가 크고,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사업은 ‘평화기행’이었습니다.

2016년 <평화,인권 해설사>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진행된 사업의 목적은 ▲대전지역 평화와 인권교육 기행코스 개발과 시민교육 공간과 기회제공 ▲평화와 인권해설사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지역 시민활동가 발굴육성 ▲

대전지역 평화와 인권의 역사현장 기행프로그램 진행과 평화와 인권 의식 고취 ▲역사현장에 대한 교육소재자 제작 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표-2>와 같은 민주·평화·인권·역사 기행 코스에 대한 기행 프로그램과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평화의 소녀상, 대전형무소 터, 산내 골령골을 중심으로 25회, 총 557명이 참가하는 기행해설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도 총 17회, 483명이 참가하는 기행해설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산내 골령골과 연계하여 노근리 평화기행을 안착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19회에 걸쳐 525명이 참가했고, DMZ 평화기행과 제주평화기행으로 확대하여 기행프로그램의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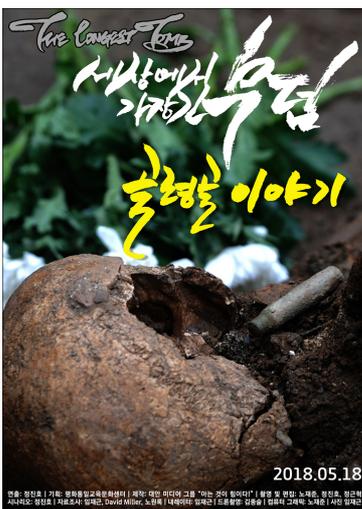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
(2016. 도서출판 문화의 힘)

실내 강연뿐 아니라, 기행해설의 경우에도 교육 수혜자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언론 활동’과 ‘출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와 ‘통일뉴스’의 객원기자 활동을 사업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역의 통일관련 행사 등을 취재하여 52건의 기사를 두 매체에 송고했습니다. 2016년에는 통일뉴스에 54건, 오마이뉴스에 35건의 기사를 송고했고, 2017년에는 통일뉴스에 61건, 오마이뉴스에 44건의 등 총 105건을 송고했습니다. 두 매체에 중복송고 건을

제외한다면 연간 78건의 기사를 생산해 냈습니다. 기사 조회수 확인이 가능한 오마이뉴스의 경우, 적게는 1,000회에서 많게는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는 “[카드뉴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산내 골령골, 첫 번째 이야기-'꼬르륵' 소리에 확인사살, 그렇게 7천명을 죽였다”(2016.07.05.)로 1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업과 연구 성과들을 출판물 통해 교육영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산내 민간인 학살 관련 연구와 평화기행의 내용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2016. 도서출판 문화의 힘)을 펴내, 산내 골령골 평화기행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도 진행했습니다. 그간 연구와 기행해설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와 함께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골령골 이야기’(상영시간 59분)를 제작했습니다. 5월 18일(금) 저녁 7시 롯데시네마 대전둔산(5관)에서, 제작과 편딩에 동참해준 분 등을 초대해 진행하는 VIP 시사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습니다. 5월 29일 저녁 7시(현지 시간)에는 영국 런던대학교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 Studies) 초청으로 SOAS Alumni Lecture Theatre에서 상영회 및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에는 6월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원본 파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무덤, 골령골 이야기’> 포스터(왼쪽)와 시사회 장면(오른쪽)



2. 계획과 방향 그리고 제안

1) 융합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평화(Peace), 통일(Unification), 민주(Democracy), 인권(Human Right), 역사(History), 생태(Ecology) 등 다양한 교육목적의 가치들이 있다. 교육의 목적을 특정 영역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목적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특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융합적 교육목적 설정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2) 지역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화(Peace), 통일(Unification), 민주(Democracy), 인권(Human Right), 역사(History), 생태(Ecology) 등의 가치들은 지역적이기보다는 전국적 또는 인류적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영역은 지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공동체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육 방법의 다양화, 다각화

‘교육’이라는 용어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이란 뜻

으로 가르침, 강의, 교수 등과 유의어입니다. 그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일방성과 공간제약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교육의 방법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시민교육에서도 교육 방법을 다양화,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상교육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4) 복합 교육공간 필요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복합공간이 필요합니다. 복합교육공간에는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으로서 ‘교육관’과 ‘영상관’은 물론이고, 교육 수혜자뿐 아니라, 교육자를 위한 연구 공간으로서 ‘자료관’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특정 분야에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하나 부딪치면서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접근의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빙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공간을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면 다른 부가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교육사업의 현재와 과제

전세환(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학술교육위원장)

(사)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하 계승사업회)의 정관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과 정리 및 보존, 연대기와 인물사전 편찬 등 민주화운동 역사 편찬 사업
2. 민주화운동의 평가와 발전 방향 연구 등 학술연구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민주화운동 정신 교육전문 강사 양성 등 교육사업
4. 민주열사 추모제 및 기념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 민주화운동 선양사업
6. 대전충남 민주화운동 기념관 및 체험학습장의 건립·운영
7. 기타 운영을 위한 수익 및 부대사업

계승사업회 민주시민아카데미 사례

2012 민주시민아카데미

청년 체질개선프로그램 - 바꾸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 참가대상 : 대학생과 대전시민 누구나
2. 장소 : 충남대학교 문원강당
3. 참가신청 :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485-8615), 대전청년회(257-3973)

참가비 10,000원(계좌번호: 농협 480-17-003566)

4. 아카데미 일정

<p>1주차 소통 : 아싸가 되지 말자 (※ 아싸: 아웃사이더) 9월 5일(수) 오후 4시 오리엔테이션 문화를 통한 소통 - 문화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강사 :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 문화콘텐츠 기획자 겸 공연연출가</p>
<p>2주차 시력 :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9월 13일(목) 오후 4시 PD수첩에 PD가 없다 - MBC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강사 : 최승호 전PD수첩 PD</p>
<p>3주차 공감 : 내가 바로 너야 9월 20일(목) 오후 4시 예비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2012 노동의 진실 강사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p>
<p>4주차 참여 : 투표근을 단련하라 9월 27일(목) 오후 4시 2012 우리의 선택은? - 유창선 박사가 들려주는 대선 썸머리 강사 : 유창선 정치학 박사</p>
<p>5주차 직접행동 : 우린 노는 물이 달라 10월 4일(목) 오후 7시 70년대 금지곡 콘서트 - 우린 노는 물이 달라 장소: 유성 공동 옷골공원 강사(dj): 김주열</p>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사례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일 이야기”

○ 신청 :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등학생 선착순 100명

(전화 또는 방문 접수 후 입금 확인 순)

※ 접수처 :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485-8615),

유성도서관 (601-6532)

※ 신청자 중 5강 이상 수료자는 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자 중 5강 이상 수료자 전원에게 참가 기념품을 선물합니다.

※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	날짜	강좌내용	강사
1강	5. 12 (토) 10:00	오리엔테이션	김한중 (EBS PD, 지식채널-e)
		□ 지식, 마음을 움직이는 메세지 - 심장의 알람 지식채널-e 만들기	
2강	5. 19 (토) 10:00	□ TED의 문을 두드린다. -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천영환 (TEDx Licensee / Daejeon Director)
3강	5. 26 (토) 10:00	□ 희망을 노래하는 작은 실천, 공정여행 - 지구와 지역이 웃는 공정여행	고두환 (공정여행 공감만세 대표)
4강	6. 2 (토) 10:00	□ 유네스코로 세계시민되기 - 함께 만드는 지구촌, 그리고 청소년	김동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사업단 팀장)
5강	6. 9 (토) 10:00	□ 청년, 세계에서 길을 찾다 - 햇볕한줄, 나눔의 에너지	김주만 (KAIST, 태양열 적정기술 섬광 대표)
6강	6. 16 (토) 10:00	□ 지속가능한 판따라질을 꿈꾸다 - 나에게 음악이란...	고건혁 (붕가붕가레코드 대표, 장기하와 얼굴들 소속사 대표)

어린이 민주시민교육 사례

“민주주의, 어렵지 않아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o 주5일 수업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민주주의를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한다.
- o 민주주의와 더불어 인권에 대한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교육에 증진에 이바지 한다.
- o 참가자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한다.

2. 참가대상 : 전광역시 관할 초등학교 5~6학년 누구나 (단, 선착순접수)

3. 장소 노은도서관

4. 참가신청 :

접수처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485-8615),

노은도서관(601-6610)

5. 사업 주요내용

“민주주의, 어렵지 않아요”

o 신청 : 대전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선착순 40명

(전화 또는 방문 접수 후 입금 확인 순)

* 접수처 :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485-8615),

노은도서관 (601-6610)

※ 전체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합니다.

	날짜	강좌내용	강사
1회	5. 26 (토) 10:00	오리엔테이션	
		□ 나에게 민주주의란? - 자기소개, 조 나누기, 벽깨기, 인물탐구 '김대중'	서은덕 (문화예술기획자)
		□ 우리가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 참여와 소통으로 민주주의 체험하기	정완속 (디모스 대표)
2회	6. 2 (토) 7:00~ 19:00	□ 민주주의 찾아 떠나는 여행 - 국회헌정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영동대공분실, 이한열 기념관, 서대문형무소 등	진행 : 공감만세 (청년 사회적기업)
3회	6. 9 (토) 10:00	□ 가족과 함께 만드는 민주세상 - 기행발표, 가족 민주주의 인권선언문 발표	전세환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학술교육위원장)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

※ 위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승사업회 학술교육위원회의 주요 사업중에 장기간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아카데미이다. 2000년대 불어온 인문학 열풍과 외부 유명강사 초청으로 인한 시민들의 욕구충족, 지역 공공도서관을 통한 접근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민주시민아카데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성인 대상 민주시민교육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던 초등학생 대상 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년간 약 50여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였다. 관내 초등학교 5~6년 대상으로 진행된 '민주야 소풍가자'(민주주의 현장체험학습)는 교과서에 나오는 철차적 민주주의를 체험해 보고 지역의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습시기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2018년에는 참가자 부담으로 진행중에 있다.

꾸준히 진행해 오던 민주시민아카데미가 박근혜 정부 이후 단절되었던 배경은 예산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및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체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의 문제이다. 지역의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단체가 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예산 마련도 급급한데 교육사업에 예산 안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한 중앙집권적인 예산 배분은 지역 민주화운동과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과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다.

향후 민주화운동 지원에 관련한 법률적 개정과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